민주, 당원주권 시대…광주·전남 신규 권리당원 모집 열풍

14일까지 신규 당원 가입하면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권리 행사
광주시당 입력요원 알바 고용 …주소지·필체 같으면 반려 되기도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에서 신규 권리당원 모집 '열풍'이 불고 있다.

최근 정청래 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일반 당원의 압도적 지지를 통해 당선된 뒤 내년 지방선거에 나설 입후보자들의 권리당원 모집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서다.

특히 정 대표가 당원 중심 경선을 예고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14일까지 진행되는 신규 권리당원 가입도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에 따르면 최근 광주·전남지역의 신규 권리당원 신청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민주당 당원 복당 신청은 7일까지이며, 신규 당원 신청은 14일까지다. 입당원서 처리기간이 최대 2주가 소요된다는 점에서 14일까지 신청된 신규 당원이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내년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권리행사 시행일은 2026년 3월 1일이며, 6개월 전인 이번달 31일까지 입당을 해야한다.

올해 3월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 한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권리당원 선거인단 자격이 부여된다.

시·도당은 현재까지 정확한 신청 건수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예년보다 신청이 급증하고 있어 당원 명단 입력을 위한 임시 아르바이트 생까지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당만 10여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상황으로, 앞으로 권리당원 신청이 더 많아지면 아르바이트생을 추가 고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신규 권리당원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배경에는 내년 6월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당내 경선에 대비해 권리당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선출된 정청래 당 대표가 '당원 주권'과 '노컷오프' 경선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권리당원 표심이 경선 향배를 좌우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모든 출마자에게 경선 기회를 보장하는 노 컷오프와 공정한 당내 경쟁을 통해 더 강한 후보를 지방선거에 내세우겠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현역이나 신인 등이 모두 경선에 나와 경쟁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권리당원 확보에 사활이 걸린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타진하고 있는 출마 예정자들은 권리당원 확보를 위한 물밑 경쟁을 벌이면서 지역 조직을 총동원해 입당 원서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역 자치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들은 그간 다져놓은 조직력과 인맥을 활용할 수 있어 비교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면 신인 도전자는 불리한 여건 극복을 위해 권리당원 확보에 목을 매고있다.

권리당원 명단이 후보자에게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가입시킨 당원이 당내 경선에서 사실상 자신을 위한 '확실한 표'가 된다는 점에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도당에 몰리는 신규 당원 신청서가 중복되는 부작용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당원의 경우 이미 입력된 주소지가 다를 경우 반려가 되기도 하고, 입당 신청서에 필체가 다른 경우에도 무더기로 반려되고 있다.

개인 신상 정보와 주소지 등의 수기란에 적힌 필체가 다른 경우까지 모두 받아주면 한 주소지 기준 4명까지 입당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주소지에 수십명의 당원이 접수되고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최근 '밀실 쪽지 투표' 논란으로 물의를 빚어 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에 무더기로 회부된 광주시의회 시의원 10명도 권리당원 확보를 위해 더 열을 올리고 있다는 이야기 까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심(黨心)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입당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당원모집 경쟁이 과열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진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 민주 24시간 뒤 표결할 듯

4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께 개의한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주도하는 방송3법 등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1개의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만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5일 끝나는 7월 임시국회 내에서는 물리적으로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방송3법 가운데 나머지 2개 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간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민생 개혁 입법들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검찰·언론·사법 개혁 중 하나인 언론 개혁 관련 방송 3법이 맨 앞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농산물 생산량 사전관리 … 안심하고 농사 지을 수 있게
과잉생산 땐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열어 수급대책 심의

양곡·농안법 국회 통과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회와 농산물 생산량을 사전에 조절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안의 대안을 마련했다.

양곡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쌀 수급 균형 면적과 논 타 작물 목표 면적을 미리 계획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타 작물 전환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논에 다른 작물을 심는 농가에 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하도록 했다.

선제적으로 수급 조절을 했지만 불가피하게 쌀이 과잉 생산돼 쌀값이 하락하면 생산자 단체 5명 이상이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대책을 심의하고, 정부가 이 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농안법의 경우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품목에 대해 수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생육부터 출하까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 같은 수급 관리 노력에도 농산물 평균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차액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대상 품목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고 기준 가격은 생산 비용과 수급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쌀과 5대 채소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품목을 점차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각 수급관리위원회 구성과 기준 가격 설정을 위한 하위 법령 제정 등 과제가 남아 있는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법 개정에 따른 예산을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다.

양곡법 개정으로는 체계적인 수급 정책이 이뤄져 지금보다 쌀 과잉 문제가 줄고 수급 조절에 소요되는 예산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서 사전 수급 관리 없이 양곡법을 개정할 경우 오는 2030년 벼 수매에만 1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면 2000억원 정도 증액하는 수준으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농안법의 경우에도 평년 가격으로 추계한 5대 채소 기준 수급 조절 예산은 1조1906억원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앞으로 농업계와 국회,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해 선제적 수급 조절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면서도 농업인이 쌀을 포함한 농산물의 가격 변동에도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1985 - 2025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전문건설인 대한민국을 세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40주년 혁신적인 건설문화를 선도합니다!